23일 Market Index
코스피 2599.62 (+28.92)
코스닥 745.19 (+6.85)
금리(국고채 3년) 2.936 (-0.007)
환율(원·달러) 1382.40 (+2.3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하나금융그룹

100조 간접지원 카드 꺼낸 野… 장기적 경쟁력 강화 효과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

〈中〉 정치권, 지원법안 경쟁

與, 직접 보조금 투입 방안 발의
野, 세액공제 등 정책금융 강조
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특정분야 투자, 시장경제 어긋나"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제약·바이오포럼' 성료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37만평 규모 초대형 녹지 만든다

경부선·경원선 일대 총 67.6㎞ 구간
대규모 녹지네트워크 공원으로 조성
역사부지, 매각전제 입체·복합개발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선로부지(122만㎡)는 약 37만평 규모의 초대형 녹지로 만들고, 철도 역사부지(171만5000㎡)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신(新) 경제 코어를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 지상철도 전체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경부선 일대 34.7km, 경원선 일대 32.9km, 총 67.6km 구간의 선로부지를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 가용지로 창출해서 도시·역세권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구간을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시는 선형의 선로부지는 초대형 녹지로 가꾸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복합개발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한 171만5000㎡ 크기의 상부 공간(역사부지)은 업무·상업·문화시설로 복합개발해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로 총 25조6000억원(경부선 약 15조원+경원선 10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키로 했다.

시가 추산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총 31조원(경부선 약 22조9000억원·경원선 8조1000억원)이다. 개발 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 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개발 이익 부족시 사업비를 국·시비로 메우게 되느냐'는 질문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사업비는 가급적 많이 잡고, 개발 이익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가 재정 내지 시비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시비에 대한 부분도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주택용은 동결

민생·자영업 상황 종합적 고려
대기업 10.2%↑, 中企 5.2%↑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의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4년 한전의 상반기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2023년 연결기준 약 122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2차관(사진)은 "에너지를 맡은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아직 한전 경영 정상화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은 민생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계약전력 300키로와트(kW)이상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은 현재 164.6원/kWh에서 24일부터 10.2% 인상된 181.5원/kWh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기존 168.9원/kWh에서 5.2% 오른 177.4원/kWh이 적용되면서, 대기업용 요금이 중소기업용 요금을 앞지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별로 산업용(을) 이용 대기업은 연평균 1억1000만원 내외,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연간 평균 100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윤-한 면담 겨냥 "아쉽고 안타깝다… 정치 복원해야"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친韓'이 제시한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안, 논의해볼 가치 있다"

▲ 추경호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 절차와 시간 필요" 한동훈에 '선긋기'

▲ 조국 "윤석열·김건희는 권력 공동체… 무도한 권력 끌어내리는 것은 정당방위"

▲ 박찬대 "검찰,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대신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 /사진 뉴시스

▲ 김태흠 "여당 대표가 언론에 다 떠들고 만나자는 것은 대통령 향한 협박"